

저출산 등 돌봄 개선 약속… 기후위기 대응 구체성 떨어져

윤석열, 10대 국정운영 계획

임신·출산 전 여성 건강검진 확대
요양병원 비용부담 완화 등 공약

전국 250만호 주거안정 비전 제시
기후위기·4차혁명 등 시야 좁아



윤석열 캠프는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윤석열 후보의 비전'을 하루에 하나씩 발표하며 총 10가지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화두로 제시했던 돌봄, 청년 분야에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이었지만, 기후위기, 4차 산업 혁명, 젠더 갈등 등 시급한 현안은 작은 부분으로 언급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10번의 발표 중 5번(돌봄, 출산, 아동학대, 간병, 육아)을 돌봄 관련 비전으로 할애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출산 전 여성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 아동 조기발굴 시스템과 재학대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반으로 줄

이고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안정 비전', 취업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하는 '청년 비전', 코로나19 손실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자영업

'비전', 대변화의 시대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보 비전', 성범죄 흉악 범 처벌 강화와 죽벌 소년 연령 하향을 통한 '법 공정 집행 비전' 등도 눈에 띄었다.

다만, 시급하나 비전에 담기지 않은 공약도 있었다. 전인류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기후위기'는 안보 비전의 하위 분야로 사회 각 분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에서 다루는 데에서 잠깐 언급하는 데에 그쳤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기후정의 세계공동행동 집회에 참석해 "기후정의의 정부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에 혁신 성장 동력을 더해줄 '4차 산업 혁명' 관련 언급이나 세대와 젠더 간극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비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시야가 좁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국장은 "지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이고 산업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국민의 힘 쪽 공약을 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경쟁화하고 있는 것에 시야가 좁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 배출을 반대하면서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유럽이나 미국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이념 상관없이 정치 세력이 기후 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선이랑 본선 공약은 다른 것"이라며 "당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에서 종합 공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약도 구체화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안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당 차원의 공약 개발까지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박 교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만들어낸 공약을 조율하고 보완해야하면서 공약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윤석열에 1대1 회동 제안

"희망·비전 논쟁하는 장 평가받고파
과거보다 미래, 보복보다 민생 생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1대1 회동을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대선 과정이 역대로 가장 많은 정책 토론이 이뤄져 미래를 놓고 희망과 비전을 논쟁하는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성이 생명이고, 또 야당 후보가 국가와 국민의 삶,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 나라를 나온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실천력과 실력을 보여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들 경쟁하는 것 자체가 국가발전 원동력이 된다"며 "과거보다 미래를, 보복보다는 민생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과거청산 중요하고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

며 "각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는 민주 공화국의 구성원이고 공화국에서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일할 머슴이 필요하다"며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우리 미래 만들 수 있는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께 보여드리는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아가서 국민께서는 우리

의 삶 제대로 바꿔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정치세력이 어딘지 판단하고 싶어한다"며 "필요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각자가 가진 철학과 가치, 비전과 정책, 실력과 실천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 정책 토론의 장을 가져보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과거 절망이 아닌 미래 위한 희망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회동을 통해서 국민의 힘 포함한 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동의하는 민생개혁안이 많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원 여력 부족"

與野, 604.4조 예산안 놓고 공방
국힘 "지원땐 22조 국채 발행해야"
민주당 "논의 통해 빠른결론 낼 것"

여야가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선 재차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가능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여러 가지 요건상 올해는 추경도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이 후보가 제안한 1인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50만원' 지급에 대해 "우리 국민 전체 5000만 명이라 해도 30만원이면 15조원이 든다. 50만원이면 25조원"이라며 "추가 세수가 10조원이라 하면 40%는 지방교부세, 30%는 국채를 상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계산하면 10조라고 하면 3조만 남아 만약에 정부·여당이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2조~22조원 정도를 국채 발행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묻자 김부겸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류 의원이 "결국 (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부채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후보의 제안은) 내년 대선을 위한 매표성 자금살포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후보가 아마 비전, 국민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니 (방향 제시를 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당정과의 갈등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8일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이 계속 추가로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부정적 입장이고, 이 후보는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부족하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어 당정 간 더 치열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자는 게 오늘 정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선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국민이거나 선택적이거나 이런 논쟁을 떠나 우리 GDP 대비 1.3%는 약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국격에 맞는 추가지

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당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추계가 나와야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10~15조 정도라고 한다면 전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20~25만 원 정도"라며 "5차 재난지원금이 88% 지급할 때 11조 정도 들어갔다.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은 국가부채·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하는 등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체 국가부채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더 올라갔다"며 "물론 코로나 등 이유를 대지만 국가재정뿐 아니라 국가 경영에 여러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코로나 19라는 급작스러운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서 경제 위축도 막아야 하고, 국민들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정의 기자 pathfinder@